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안 재(再)발의

■ 지난 5월 29일 나이지리아 굿luck 조나단 대통령이 석유산업법안(Petroleum Industry Bill)¹⁾ 수정안을 공식 발표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산업의 규제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08년 석유산업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다국적 석유메이저²⁾의 반대와 로비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계류 중임.

o 이로 인해 개발권 협상(licensing rounds)과 체결, 계약 갱신 업무 등이 지연되어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³⁾

- 조나단 대통령은 석유산업법안 계류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 석유산업법제정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속한 법안 상정·통과를 촉구함.

■ 동 석유산업법안은 △ 석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 △ 투명성 제고 △ 세수 확보 △ 나이지리아석유공사(NNPC) 구조조정 등의 목적과 내용을 골자로 함.

- 세부내용으로 △ 하류부문(downstream)으로의 석유부 관리·감독권 확대 △ 광구사용료(royalty) 공개원칙 도입 △ 석유기업에 대한 수익세율 명시 △ NNPC의 규제권한 박탈 등이 포함

- 초안에서 강조된 투명성 제고 및 세수 증대 관련 조항들이 대거 누락되는 등, 석유산업법안이 전반적으로 석유업체들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평가

o △ 서명보너스⁴⁾ 등 석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내역 공개 의무화 △ 생산물분배 계약⁵⁾ 조건 및 내용 공개 의무화 △ 소득세 공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명성 개선 및 세수 증대 여부는 미지수임.

o 반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석유메이저들은 수정안에 안도하는 분위기임.

- 또한, 석유부로 행정·관리·감독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석유메이저와의 유착 및 부정부패 심화⁶⁾ 등이 우려되는 바임.

1)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산업법 제정을 통해 석유산업 관련 기존 법률인 석유법(Petroleum Act), 석유소득세법(Petroleum Profits Tax Act), 나이지리아석유공사법(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ct)을 총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코자 함.

2) 나이지리아 석유산업(탐사·개발·생산)의 주체는 셸, 세브린, 엑손모빌, 토탈 등의 석유메이저들임.

3) 2002년에 실시된 광구 탐사가 34개에 달한 것과 대조적으로 2009/10년간 실시된 석유시추는 한 건에 불과함(헤럴드경제, 2011.02.19).

4) 서명보너스(signature bonus)란 유전탐사 개시 전, 탐사권 확보에 대해 해당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을 일컫음.

5)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이란 유전개발 참여사와 유전보유국 간의 계약으로, 유전개발사의 개발 비용 보전 후 개발사와 유전보유국이 생산물에 대해 받게 될 수익 비율을 규정하는 계약임.

6)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순위는 하락 추세에 있음: 121/180(2008) → 130/180(2009) → 134/178(2010) →

■ 그동안 석유산업법안 통과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온 석유메이저들의 반발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유산업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

- 석유산업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확실성(level of certainty)이 증가하여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유전 탐사 및 개발 단계의 신규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Oxford Analytica, KOTRA 라고스 무역관, Financial Times, Reuters〉

(전혜린 연구원)